모든 소득 합쳐 건강보험료 부과

인턴제 폐지 수련의제도 개편… 종합병원 기준 병상 100개→300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장기적으로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되고, 무의미해진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련의 제도에도 대폭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또 동네의원의 병상 설치를 억제하는 대신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병상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방안 등을 심의했다.

미래위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 사업, 금융, 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해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직장-지역 등 직역에 상관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또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1차의료 전담인력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래위는 수준 높은 입원 환경 조성을 위한 품질 관리와 전략적 병상관리계획을 통한 병상자원 관리 합리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동네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는 대신, 종합병원급은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기준개선도 추진한다.

무분별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이들 장비를 이용한 검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대상 특수 의료장비의 종류를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검사도 노후도에 따라 더 자주 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정과 공적의무 부과, 공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합과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국공립병원의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료 확충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심의했다. /연합뉴스

무상급식 주민투표 여론전 가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 참여와 거부 운동을 벌이는 양측의 여론전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17일 한나라당(왼쪽)과 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참여와 거부 운동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월소득 4000만원·재산 179억 딸·사위 있는데도…

10년 넘게 기초수급자 혜택

복지부, 3만3천명 자격 박탈… 광주·전남선 4천명

부양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광주·전남지역 기초생활수급자 3941명이 수급자격을 잃게 됐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수준 조사에서 매달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론 3만3000명이 수급 자격을 박탈당했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936명, 전남지역에서는 3005명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파악돼 수급자격을 상실했다. 광주의 경우 전체 수급자 6만6476명(3만2457가구) 중 1.4%에 해당하는 936명(598가구)가, 전남지역은 조사대상자 9344명의 수급자 중 32%인 3005명이 박탈 대상에 해당됐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의 한 독거노인의 출가한 딸은 매달 1000만원을 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광양의 한 수급자는 그동안 부모 이혼 뒤 할머니에게 양육되면서 2003년부터 수급자로 보호받았지만 이번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가족관계원부가 연결되면서 매달 소득이 236만원인 아버지가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자 38만명 가운데 3만3000명의 수급자격을 박탈했다.

수급자격을 잃게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496명, 1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495명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80대 노인은 딸과 사위의 월 소득이 무려 4085만원, 재산이 179억원이나 되는데도 지난 2000년부터 10년 넘게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오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반면, 복지부는 수급 탈락자 가운데 사정이 어려운 1만6000명에 대해서는 차상위 의료·장애·자활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지자체 자체지원, 민간지원 등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이번 조사에 따라 수급자 약 14만명의 급여가 축소됐고, 9만5000명의 급여는 늘어나게 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영락공원 화장로 2기 증설

전국 최대 장사시설을 갖추고 이용객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광주 영락공원이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화장로 2기 증설, 난방시설, PC실, 영상실 등 내부시설 리모델링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7일 "대기실에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장로 2기를 9월까지 증설, 모두 9기로 늘리는 등 이용객 증가를 감안한 시설 보완과 함께 민원인 PC실 3대, 대형스크린 1대 편의시설도 설치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오는 10월까지 마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 제2시립 공원묘지인 영락공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화장, 매장, 자연장, 개별봉안, 가족봉안, 2기용 평장분묘까지 장사시설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이용객 범위를 광주·전남에서 전국으로 넓힌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도시환경 회의 서포터즈 모집

광주시는 오는 10월11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열릴 '2011 도시환경협약(UEA) 정상회의' 개최 기간 동안 회의 참가 해외도시대표단들에게 차량 이동지원, 통역, 관광 안내 등을 해 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지역 연고 기업이나 사회단체, 시 산하기관 등은 오는 9월 16일까지 홈페이지(www.gjsummit.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062-611-3799)나 이메일(gwangju@2011uea.com)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기업 또는 단체 단위로 70곳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가 라운지

민주의원, 고승덕 상대 손배소 청구

민주당 박병석 신학용 조정식 의원은 16일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해 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에 급급한 고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일에는 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서 "부산저축은행이 국내에서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사업 등은 인허가를 받기 어려웠음에도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전 정권 시절인 2005~2008년 초 추진된 사업들로 당시 정권 실세의 비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손숙미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외국의사와 치과의사의 비율을 갖춰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했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은 병상수의 50%로 제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학등록금 1조5천억 지원 추진

당정, 학자금 대출 무이자 하위소득 30%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 방침을 재확인했고,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부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 마련과 지원방식에 관한 세부설계를 거쳐 지원금액을 발표하자고 했다"면서 "내달 7일 3차 민생예산 당정협의회에서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을 놓고선 무이자 적용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에는 이자를 일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지난 2007년 확정한 지원규모 21조원을 늘리기로 하고 축사, 과수, 원예 등 농어촌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해외인턴,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농어촌 면세유 지원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연합뉴스